

최종진술서 (20170927)

재판장님,

6 월부터 다시 이어진 2 심공판에서, 저의 진술과 변호인의 변론에 의해 이 항소심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이었는지 이미 잘 파악해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보신 것처럼 1 심에서 수많은 자료와 진술서, 그리고 변론을 제출했고, 세번에 걸친 2 심에서도 저는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중상에 가까운, 왜곡으로 가득한 것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압도적인 부조리를 마주 하게 되면 사실, 말을 잃고 맙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고발당한 이후의 이 3 년은, 검찰이나 원고측 변호인과 싸워 왔다기보다는, 그렇게 말을 잃게 만드는 부조리 앞에서 허무나 무기력에 빠지지 않고, 무의미한 질문과 비난에조차 대답할 수 있도록 저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저자신과의 싸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재판장님,

검찰은 저의 책을 ‘허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의 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1 심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대신, 제가 패소했던 민사재판판결을 가져와 그 판결이 옳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형사 1 심은 준비재판을 합하면 10 회 이상 진행된 재판이었습니다. 특히 본재판은 매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진행되어, 재판부에 변호사와 저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었던 재판이었습니다. 1 심에서는 대부분 학술적인 이야기들이 오갔는데, 판사님은 그런 이야기들에 충분히, 그리고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1 심에서의 저의 승소는 그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발 직후에 시작된 가처분재판에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저는 출석을 하지 않았습시다. 지금 생각하면 잘못된 판단이었지만, 저의 의견을 서류로만 전달했던 것이 패소의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당시만 해도 지원단체에 의해 구축된 세간의 위안부문제에 대한 ‘상식’이 너무나 천편일률적이어서, 재판부 역시 그러한 상식에 기대어 피상적이고 편협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해배상 소송 역시, 출석은 했지만, 재판은 매번 5 분이나 10 분만에 끝났고 저에게는 발언권이 거의 주어지지 않았습시다. 심지어 최종진술 때조차, 고작 15 분 정도의 원고였는데도 판사는 다 듣지 않고 저를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은 제가 쓴 학술서가 문제시된 재판이고, 검사든 변호인이든 결국 많은 부분에서 학자의 견해를 대변할 수 밖에 없었던 재판입니다. 당연히, 저자신의 견해가

얼마나 직접적으로 전달되었는지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검사와 원고측 변호인이 옳았다고 주장하는 민사재판의 두 판결은, 저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개선할 수 없었고, 원고측 보도자료의 영향이 아직 강하던 시기의 결과입니다. 이 두 재판부는, 저의 책조차 제대로 읽지 않고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동안 재판을 진행하면서 제가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검찰의 비난이나 질문이, 책 자체의 시시비비를 합리적으로 따지는 차원을 벗어나, 박유하라는 사람자체, 그리고 <제국의 위안부-식민지배와 기억의 투쟁>이라는 제목을 가진 한권의 책을 매장하는 일 자체가 목적이 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왜곡과 허위로 가득한 지적과 추궁이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말하자면, 과거 유신독재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제가 하지 않은 말을 제가 한 것처럼 꾸며서, 고발하고 기소하고 범죄자 취급을 한 것이, <제국의 위안부>고발 사태입니다. 어처구니없게도, 그 기초작업을 한 것은 위안부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로스쿨 학생들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태였지만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동안 저의 책이 검찰이 말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고, 책에 집중해 해명해왔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는 저의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2심에서도, 짧은 시간이나마 검찰의 주장에 얼마나 허위가 많은지, 이들의 고발과 기소 내용이 얼마나 저의 책과는 동떨어진 것이었는지를 이미 이해해 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말하자면, 이들이 말하는 위안부할머니의 분노란, 언론이나 국민들이 그랬던 것처럼, 원고측과 검찰이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책이 결코 검찰이나 원고측이 말하는 그런 책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위안부할머니 입장에 서서 할머니의 고통과 슬픔을 한국과 일본의 일반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일본정부에는 책임을 묻는 책이라는 사실은, 1심에서 제출한 한국어 판이 나온 직후의 신문 서평들, 일본어 판이 나온 이후의 일본의 이른바 `양심적` 지식인들의 반응과 서평 등이 말해 줍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일토당토 않은 고소가 이루어졌던 것일까요. 1심에서는 참담한 기분을 누르고 책에만 집중해서 저의 책이 검찰이 주장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왔지만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 이 고소가 도대체 왜 이루어졌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야만, 이 소송의 본질이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1. 고소주체는 누구인가

재판장님.

2014년 6월에 제출된 첫 고소장에는 위안부 할머니가 아니라 저를 고발한 지원단체의 생각이 놀라우리만큼 솔직히 적혀 있습니다.

검사는 민사재판에서 삭제를 명한 34 곳에 한곳을 더한 35 곳을 문제로 지적했지만 고소인들은 원래 109 곳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해 여름에 A4 150 매에 이르는 반론을 제출하자 재판기일을 연기했고, 다음달에 출판금지를 요구하며 지적했던 109 곳을 53 곳, 즉 반으로 줄이는 식으로 고소내용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요구했던 전면출판금지를 철회하고 일부 삭제 후 출판으로 요구내용도 바꾸었던 것입니다. 저의 반론을 읽고 자신들의 주장에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철회된 지적 50 여곳 중에는 위안부관련 항목 뿐 아니라 지원단체에 대한 비판부분이 상당수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일부만 읽어 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들이 제가 위안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지적한 문장들 중 많은 부분은, 정대협이 주장이나 운동방식에 대한 비판입니다. <제국의 위안부>는, 한국인 위안부의 증언집을 분석한 책이기도 하지만, 20 년이상 정대협이 한국사회에 심어온 위안부 관련 인식에 대한 비판서이고, 부제목이 된 <식민지 지배와 기억의 투쟁> 에서의 <기억의 투쟁>이란, 위안부문제를 부정하는 일본인들과 정대협을 비롯한 지원단체들의 대립 정황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양쪽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이 책을 썼던 것입니다.

(이하 인용부분중 밑줄 친 부분이 삭제대상으로 지적된 곳입니다.)

1) 하지만 정신대를 위안부로 혼동했다는 것을 알게 된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던 것처럼, 정대협은 위안부에 대한 이해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그저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바꾸거나 전시내용을 조금 바꾸었을 뿐이다. 그러나 정대협의 인식이 한국의 '공적 기억'을 만들어온 만큼, 위안부에 대한 이해가 바뀌었다면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야 했다.

첫 고소장은 이부분을 삭제대상으로 지목하면서 <저자는 이러한 주장을 통해, 정대협은 `다른 지역 여성들과의 근본적인 차이를 배제하고 똑같은 피해자로만 설명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합니다.

2) 사실 정대협의 현 대표는 책에서는 일본이 '1965 년의 협정 때문에 국가배상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20 년간의 수요일』). 운동 초기에는 말하지 않던 일이니, 아마도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일 것이다. 그런데도 국민들이 정보를 얻는 중요한 정보창구일 박물관이나 홈페이지에서는 그런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

(아시아여성기금을) '미봉책'으로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박물관'인 이상 미봉책의 내용이나 상당수의 위안부들이 보상금을 받았다는 사실도 말해야 옳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적히지 않는다. 말하자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보다도 정대협을 주장하는 데에 훨씬 비중이 두어져 있다.

이 부분 역시 지목하여 <'보상금을 받은 일본군 '위안부'는 62 명인데 이를 '상당수의 위안부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실은 61 명에게 전달, 60 명이 받았습니다)

3)2012 년에 '위안부'대신 '성노예'라는 단어를 공식적인 명칭으로 하자는 (정대협의) 제안이 나왔을 때 당사자들이 거부한 이유는 '성노예'를 자신의 위안부로서의 경험을 다 표현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자신의 위안부 생활이 '성노예'로 말해지는 데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의해왔으면서도 정작 그 명칭이 정착되는 데에는 반대한 것은 의식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이름이 자신들의 '과거'의 모든 것을 표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성노예'라는 호칭은 분명 '위안부'를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위안부'의 전부가 아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성노예'라고 부르는 것은 그녀들이 애써 가지려 했던 인간으로서의 긍지의 한 자락까지도 부정하는 일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는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일본군 '위안부'들이 성노예라는 단어를 꺼려하는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아픈 기억을 단적으로, 그리고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성노예 라고 불러야 한다고 정대협이 주장했던 것을 두고 비판한 부분인데, 누가 옳은지 보다, 이런 식으로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삭제요구항목으로 끼워 넣었다는 사실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분은 정대협을 직접 지칭하고 있지 않지만 운동방식을 비판한 부분입니다.

4) 하지만 그런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까지고 등신대의 자신을 마주하지 못한다. 그건 자신의 신체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가능한 한 보지 않으려고 하는 심리와 한없이 닮아 있다. 그런 욕구는 때로,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을 영원히 안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성형에의 욕구까지도 만들어낸다.

그러나, 70 세가 되어가도록 그 이전의 자신의 모습을 직시할 수 없다면, 그건 과거의 상처가 깊어서라기보다는 상처를 직시하고 넘어서는 용기가 부족해서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해방이후 한국을 의인화해서 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위안부 할머니를 지칭한 것으로 오독하고 고발자들은 <일본군 '위안부'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하는 표현입니다.>라고 어처구니 없는 지적과 함께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5) 정대협 대표가 일본에 '우익'을 감시하는 시스템이 없다면 '일본을 바꾸어야 한다'고 역설한 것은 그런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윤미향 대표의 도쿄 YMCA 강연, 2012. 6. 9.).

그것은 일본의 진보가 꿈꾸었던 '일본 사회의 개혁'과 통하는 말이었지만, 그것은 정대협의 운동도 '위안부 문제 해결' 보다 '진보'가 세상을 바꾸는 정치적인 문제에 더 중점이 두어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자신들의 주장과 다른 생각을 무조건 '우익'으로 몰고 비난해온 진보의 운동 방식은 일본의 반발을 심화시켰을 뿐이다.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20 여 년의 세월은 그런 20 년이었다. 그러면서 기지 문제에서처럼 "주연은 여성운동가이고 현장 여성은 조연, 엑스트라"(김연자, 255 쪽)가 되는 상황이 이어졌던 것이다. 그런 구조가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은 위안부 문제 운동이 늘 '민족'과 '여성'을 앞세웠고 '위안부'라는 존재가 그 두 이미지를 상징하면서 그것이 한국에서는 절대적인 정의 담론으로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6) '세상을 바꾸기 위한' 것이라는 명제는 그 모든 모순을 덮으면서 강경파들이 중심이 되어 좌우대립을 격화시켰고 결과적으로 민족/국가 간의 대립을 만들고 유지시켰다. 90년대 초반, 일본의 우파들이 결코 다수도 아니고 목소리가 큰 것이 아니었는데도, 운동이 그들을 '일본'을 대표하는 것처럼 간주하고 존재해서는 안 될 존재로 취급하고 심지어는 우익과는 상관없는 이들까지 '우익'으로 딱지를 붙이며 적대시했던 것은 그런 냉전적 사고가 시킨 일이다.

정대협의 북한과의 연대는 '민족'으로서의 연대라기보다는 실은 '좌파'로서의 연대였다.

그 자체야 문제시될 일은 아니지만, 문제는 그 결속에 중점이 두어지면서 좌파와 우파의 합작품이었던 일본의 사죄와 보상을 거부한 것이 그런 구조 속의 일이라는 데에 있다.

고소장은 이 부분을 들어 <일본군 '위안부'를 위한 정대협의 활동 내용을 마치 정치적, 특히 진보, 좌파라고 평가하여 폄훼하고 있습니다.>라면서 역시 삭제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대협의 진보좌파성향을 지적한 것은 폄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 역시 진보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으로서 진보성향을 폄훼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의 책의 또 하나의 문제제기는, 90년대 이후의 역사갈등발생과 쉽게 풀리지 않는 이유가, 냉전종식에 따른 정체성 싸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데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맥에서 지적했을 뿐입니다.

7) 정대협은 2000년대 이후 세계를 상대로 한 운동에서 미국 하원에 이어 캐나다와 유럽연합 등의 결의까지 이끌어냈다. 최근엔 미국에까지 위안부를 기리는 기념비를 세웠고, 2013년

3월부터는 다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1억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기림비들은 모두 '강제로 끌려간 20만 명의 조선인 소녀'라는 인식에 기반한 것들이다. 최근 들어 그 중에는 전부가 조선인은 아니었다는 인식도 내놓고 있지만, **정대협이 인식의 변화를 공식적으로 말하고 수정한 적은 한 번도 없다.**

2013년 1월에 이루어진 뉴욕 주 상원 결의는 한국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그건 일본의 사죄를 세계가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하나의 사례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정대협은 '아시아와 연대'해서 아시아 전역에 위안부상을 세울 계획까지 갖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여기에서는 <스스로의 주장을 바탕으로 말을 하면서 정대협이 이를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8) 정대협은 제 3국을 포함한 '중재위원회'를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중재위원회'가 하는 일은 실질적으로는 양측이 진실을 놓고 치열하게 싸우는 본격적인 싸움이다. 그런 싸움에서 승리할 가능성도 적어 보이지만, 설사 승리한다고 해도 그런 식의 해결이 한일관계 회복에 도움이 될 리도 없다.

'위안부 문제' 해결은 필요하지만, 입법해결은 불가능하다. 정말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원한다면 정부는 일본과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사죄했고, 일본의 사죄를 받아들인 위안부도 많다.

그러나 그 사실은 알려지지 않은 채, 오랫동안 사죄하지 않는 자와 용서하지 않는 자의 대립만이 큰 목소리가 되어 위안부 문제의 중심에 있었다.

이 부분에서도, '일본정부는 사죄했고 일본의 사죄를 받아들인 위안부도 많다.' 라는 부분을 삭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신들이 알려오지 않았던 사실을 지적한 것을 봉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책에 대한 고발 자체가, 위안부문제 관련해 자신들과 다른 생각이 한국사회에 확산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밑줄 친 부분에 쓴 것처럼 제가 이 책에서 강조한 건 기존 주장의 반복과 외부압박이 효과가 없었으니 일본과 직접 대화를 시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제가 일본의 책임을 부정하려 했다고 반복해 비난했던 것입니다.

9) 정대협은 소녀상 건립운동에 이어 '1억명 서명운동'이라는 것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위안부 지원(위안부들은 정부의 '인정급'과 생활지원을 받고 있어서 생활이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한다), 박물관 건립 등 그동안 이어져 온 '모금'과 '기부'운동에 수많은 일본인들이 여전히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그들의 '기부'는 정대협이 비난했던

(아시아여성)기금의 '동정금'과 어떻게 다른 것일까.

무엇보다도, 최근 들어 수요시위를 비롯한 정대협 활동에 어린 학생들이 대거 동원되는 상황은 극히 우려스럽다. 그들에게 새롭게 심어진 '반일'적 적개심을 넘어서 같은 또래의 일본 청소년들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많은 대립과 감정소모의 시간이 필요할까.

10)

정대협의 '운동'을 거대한 '국가적 소모'라고까지 느끼는 내 감성을 그저 '친일파'로 간주하려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빨갱이'나 '친일파'라는 명칭이 그저 개인에 대한 공격 자체를 목표로 하는 세월이 이어지는 한 제국과 냉전으로부터의 '해방'은 오지 않는다.

저는 어디까지나 운동방식을 비판했습니다, 또 운동자체가 아니라 소녀상 건립운동과 1억명서명 운동, 그리고 운동자체가 아니라 운동을 통해 거기서 전달되는 과장과 왜곡과 은폐를 비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고소장은, 이 부분을 들어 <일본군 '위안부'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을 통해, 현재의 '위안부' 지원활동(일본의 배상과 사과를 촉구하는 활동 포함)의 필요성을 격하시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지원 활동은 일본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관심과 도움을 주는 일본인과는 연계하고 있다는 점을 오히려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하여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대협이 이룩한 성과는 무시하면서, 정대협 활동 전체를 폄훼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며 삭제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 이 고발이 과연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것인지가 명백히 드러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았지만, 이런 식의 지적은 훨씬 더 많습니다.

말하자면, 이 고소는 위안부 할머니가 주체가 아니라,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입막음 하려는 지원단체가 주체가 된 고발입니다. 저를 고소한 것은 나눔의 집인데 왜 이렇게까지 정대협에 대한 비판부분이 지적되었던 것일까요. 그건 지원단체들이 긴밀하게 연계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책에서는 오로지 한 곳 밖에 언급하지 않았던 나눔의 집이 왜 고소에 나섰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제 1 심에 제출했던, 나눔의 집에 거주했던 배춘희 할머니와의 영상이나 통화록을 보시면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증거자료로 대화의 일부분을, 참고자료로 전체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13 년 여름에 <제국의 위안부>를 간행한 이후 저는 일본의 사죄와 보상이 어떤 형식이면 좋을지에 대한 할머니들의 생각을 듣기 위해 몇몇분의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눔의집에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친해진 분이 생겨 위안부문제와 지원단체에 대한 할머니의 생각을 직접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서 나눔의집 소장이 저를 경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 방문부터 저를 경계하면서 할머니와의 만남중에 몇번이고 와서 감시하듯 우리의 대화에 귀기울이던 나눔의집은 다음해, 2014 년 5 월에 할머니를 찾아갔을 때엔 할머니와의 면회를 허가하지 않았고, 적의 가득한 태도로 제게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날, 불교신자였던 배할머니를 위해 제가 모시고 갔던 스님 역시 함께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3 주일 후, 배할머니가 작고하신 직후에 저는 고발당했습니다.

당시 고소장에는 당시 이미 건강상 이유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던 분들의 도장까지 또렷이 찍혀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원고측 변호사의 서류에는 2015 년에 돌아가신 분의 도장까지 찍혀 있습니다. 도대체 이 고소의 주체는 누구인 걸까요?

배춘희 할머니와의 통화록에는, 손님들이 개인적으로 주는 돈을 직원이 가져 간다는 이야기, 방이 춥다고 호소해도 방한용 커튼을 좀처럼 만들어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 등 나눔의집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배할머니는 저에게 유산처리에 관한 이야기까지 하실 만큼 저를 신뢰하셨습니다.

나눔의 집은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알게 되는 것을 경계해서 저를 고발한 것을 생각합니다. 고발에 나섰을 뿐 아니라 저의 책을 왜곡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국민들의 비난을 유도하고, 저를 `일제의 창녀`라고 비난한 트윗을 리트윗하며 국민들의 혐오를 최대한 부추겼던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나눔의집에 대한 비난이 곧 한국의 수치가 될 것을 우려해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침묵과 방관이 위안부할머니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도 옳은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운동단체들이 야기한 문제를 외국언론이 말하기 시작하고 있고, 지원단체가 야기한 문제들이 “한국”전체의 문제로 비쳐지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장님,

고소장에 할머니의 도장은 찍혀 있지만, 나눔의집 소장 스스로가, 할머니들께 책을 읽어 드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오독을 저지르는 상황에서 할머니들께 어떤 방식으로 읽어 드렸을지는 명백합니다.

<제국의 위안부> 일본판을 만들어 준 일본인 여성 편집자는 제가 고발 당하자, 책을 할머니께 읽어 드리고 싶다고 말했었습니다. 저로서는 그 말 한마디가 그 어떤 변론보다도 이 책의 본질과 저의 집필의도를 말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님, 이 재판은 위안부 할머니가 주체가 아닙니다. 설사 도장이 찍혀 있고, 이 자리에 위안부 할머니가 나와 계신다 해도, 이 소송은 명백히 지원단체가 주체가 되어 시작한 소송입니다. 할머니를 도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켜왔던 것을 지키고자, 자신들이 오랜 세월 우리 사회에 심어 온 인식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해 감행한 소송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무려 10 여년전에 쓴 저의 다른 책이며 지원단체와 함께 하는 분들과는 `다른` 위안부 할머니의 목소리를 내보낸 심포지엄까지 비난하면서 저의 활동을 막아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쓴 것입니다.

제가 책에 쓴 건, 바로 그런 행태, 자신들과 다른 목소리를 언론과 국가의 힘을 빌어 비난하고 매장시키려 했던,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행태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오히려 저에 대한 고발을 통해, 자신들의 폭력적인 독선을 다시 한번 증명한 셈입니다.

2. 검찰주장/피해자의견서에 대해

검찰은 1 심이 저의 승소로 끝나자 이번에는 기존 공소장내용을 바꾸면서까지 항소했습니다. 원고측과 검찰이 첫 고소장이나 기소장 내용을 바꾼 내용을 보면, 이 고발과 기소가 얼마나 성급하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학계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채로 그저 자신들의 상식에 기대어 고소와 기소를 감행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후 자신들의 주장의 일부를 철회/수정했지만 이들이 저의 저와 책에 대해 행한 왜곡은 지금도 수정되지 않은 채 세간에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끔찍한 언어들로 저를 비난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공판에서 대부분 반박했지만, 마지막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쓰인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반박해 둡니다.

1) 기본적 태도--`위안부문제는 홀로코스트와 다르다`라는 박유하의 주장을 위안부문제를 부정한 것으로 간주한 비난에 대해

지원단체는 한 5 년 정도 전부터 여러 인권단체와 연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메니아인단체, 흑인단체, 유대인단체 등 입니다.

하지만 `인권`문제라 해서 모두 같은 것으로 취급하면 문제의 개별성이 가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각각의 문제를 만든 원인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저는 이런 식의 무분별한 연계 의 문제를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동안 위안부지원단체와 연계하는 것처럼 보였던 유대인단체들은 얼마전부터 위안부문제와 홀로코스트는 다르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도 독일 수상이 나눔의 집에 다녀간 이후, 독일 신문 역시 그에 대한 비판을 게재하면서 이 두가지 사태는 다르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¹ 따라서 저의 문제제기는 틀리지 않았었다고 할 것입니다.

2) 허위/왜곡

검찰은 저의 책이 `의도적` 왜곡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의도적인 왜곡을 하고 있는 건 검찰이 의존하고 있는 비판자들 쪽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미 1심에서 제출한 증거자료와 참고자료로 제출한 정영환에 대한 반론 등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외에도 장정일 작가, 일본의 한 시민이 정영환의 글쓰기가 얼마나 왜곡으로 가득한 것인지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역시 1심에서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2심에서 제출한 <대화를 위해서—제국의 위안부의 물음을 열다>라는 책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국의 위안부론, 혹은 관련논문을 써 준 이 책의 집필자들은 일본 우익이 아니라 각분야 선두에서 활동 중인 일급학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글이야말로 학계에서 저의 책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증명해 줄 것입니다.

동시에, 검찰과 원고측 변호인들은 저의 책이 일본의 우익을 옹호하는 것이라 주장하지만, 그 반대로, 고노담화를 부정하고 일찍부터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강조해 온 일본의 학자는 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² 비판자들은 의견이 다르면 무조건 우익으로 몰거나 우익이 지지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익이 지지한다고 해서 우익이라 할 수도 없겠지만, 우파일부의 저에 대한 비판은 원고와 검찰측 주장이 악의적인 왜곡임을 증명합니다.

3) 매춘

저는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위안부에 대한 강제연행 가능성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강제연행은 조선인위안부동원의 총체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위안부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하는 이를 방치하면서 저를 지목해 공격하는 것은, 저의 책이 사회에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저의 책이

¹ 국익을 위하여—한국 여성들은 2차대전때 일본군에 동원되었다. 그들의 고통은 오늘날 정치도구화되었다

2017/9/18 <http://taz.de/15444738/>

² 니시오카 츠토무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를 비판한다>(2017/2/1, 國家基本問題研究所 홈페이지)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1&cad=rja&uact=8&ved=0ahUKEwjwxqu61cLWAhUJgLwKHUcnAuQQFggkMAA&url=https%3A%2F%2Fjinf.jp%2Ffeedback%2Farchives%2F19941&u sg=AFQjCNG9WlvxCGRQIQ-XyUc88pzKrIvhrw <qkrdbgkdmlml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1&cad=rja&uact=8&ved=0ahUKEwjwxqu61cLWAhUJgLwKHUcnAuQQFggkMAA&url=https%3A%2F%2Fjinf.jp%2Ffeedback%2Farchives%2F19941&u sg=AFQjCNG9WlvxCGRQIQ-XyUc88pzKrIvhrw <qkrdbgkdmlml))

이들이 말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을 웅변합니다. <제국의 위안부>가 신문서평에 실리지 않고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이었다면, 또 제가 나눔의집 할머니와 가까워지지 않았다면 이들은 고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그저 자신들의 운동과 학문에 균열을 낼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궤멸시키기 위해 고발에 나서고 왜곡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비난해 온 것입니다.

4) 강제연행

2016년 11월 일본에서는 위안부문제를 위해 20년 이상 애써온, 또한 한국의 민주화투쟁때 한국을 지지하고 응원해 일본의 양심을 대표하는 지식인으로 알려진 와다하루키 교수의 책 『아시아여성기금과 위안부문제-회상과 검증』³이라는 책이 발간된 바 있습니다. 아직 번역되지 않았지만 와다교수는 이 책에서 이른바 ‘강제연행’설을 만든 요시다증언은 허구라고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일본이 정부차원에서 조사한, 현재까지 나온 가장 중요한 자료집인 5권을 엮었을 뿐 아니라 일본정부가 위안부문제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위해 만들었던 아시아여성기금의 설립부터 해산까지 가장 중심인 위치에서 관여해 온—그런 면에서 위안부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할 수 있을—와다하루키교수의 의견이야말로 현재까지 나온 학자의 위안부문제관련 주장 중 신뢰와 존경을 받아 마땅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책 중에서 위안부문제 관련한 부분은 저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위안부문제의 중심은 강제연행이 아니라 인신매매라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앞서 제출한, 2017년 7월에 서울의 한 심포지엄학회에서 발표된 도쿄대학 교수의 위안부관련 논문 역시 ‘총독부가 지시한 강제연행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⁴관현이 동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총독부의 지시가 아니라 업자의 접대에 의한 것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 교수 또한, 오랫동안 위안부문제관련 주류학자들과 함께 활동해왔던, 신뢰할 만한 학자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강제연행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안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일단 귀를 기울이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고측에 의해 제출된 나눔의집 할머니들과 형사고발에 참여한 이용수 할머니의 경험 중에 이른바 일본군에 의한 강제연행으로 볼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자료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 드리자면, 나눔의 집에 거주하지 않지만 형사고소인으로 참여한 이용수 할머니는 20년쯤 전에 대만에서 자신이 사랑한 일본군병사와 영혼결혼식을 올리기도

³ 和田春樹 『アジア女性基金と慰安婦問題』(明石書房、2016・11)

⁴ 外村大 「조선인 위안부의 모집/동원에 대해」(동아시아 화해와 평화의 목소리 제3회 심포지엄 자료집)(2017/7/1, 출판문화회관)

했습니다.⁵ 이는 제가 지적했던 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그런 관계는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외가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아주 흔한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그들에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5) 집단특정

이들은 세월호 희생자와 위안부를 같은 희생자로 보려 하지만 세월호의 희생은 명백히 같은 시각에 같은 장소에서 같이 희생된, 같은 형태의 희생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희생이 한가지 형태로 기억되는 건 당연하고 그런 희생을 모독하는 이가 있다면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위안부의 체험은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지만 구체적 체험은 다 다릅니다. 더구나 알려진 학설에 따르면 해도 최소 15 년간에 걸친 체험입니다. 시기에 따라 동원형태도 위안소에서의 체험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저는 그것을 책에서 ‘다양한 체험’ 이라고 명기했고 그런 만큼, 이들이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으니 명예훼손이 된다는 건 무리한 주장입니다.

무엇보다, 위안부 할머니들 중 다수가 가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위안부에 대해 쓴 이야기를 두고 독자들이 구체적인 누군가를 지칭해서 떠올리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6) 국제사회 의견을 부정?

검찰이 근거로 삼고 있는 국제기구의 권고나 보고서들은 많은 경우, 노예사냥처럼 끌고 갔다고 말했으나 허구로 밝혀진 요시다 증언이나 역시 근거없는 정치가의 추정에 의한 숫자,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차용해 쓰인 미국학자의 책을 자료로 해서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와다교수가 앞서의 책에서 상세하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말하자면 학계는 잘못된 자료에 의거해 기존의견을 주장하고 있거나 자신의 과도한 해석을 각각 주장중인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시한 저의 의견을 그간의 상식에 기대고 혹은 자신들의 주장만을 믿어 온 이들은, 그저 ‘허위’, ‘왜곡’ 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에 나섰던 것입니다. 국제기구 관련 지적은 검찰도 기소장에서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지적한 바 이들의 주장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1 심에서 제출한 증거에도 있으니 살펴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이들에게 제출된 자료자체가, 처음부터 정대협등 지원단체가 제출한 것이기도 하고, 2000 년대 이후에는 정대협 인사들이 유엔기구의 위원이나 이사로 활동 중입니다.

⁵ 위안부출신 할머니 일본군장교과 영혼결혼식(중앙일보,1998/8/27)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6&cad=rja&uact=8&ved=0ahUKEwj6L2N1sLWAhWCEpQKHUt2AN0QFggzMAU&url=http%3A%2F%2Fnews.joins.com%2Farticle%2F3689266&usg=AFOjCNE9YKMTkJa_nNqaCZJy7OfMF3gkoA

그러한 구도 속에서 한국의 주장과 판박이인 보고나 권고등이 나오는 건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7) 모순

당연한 일이지만 검찰도 원고측 변호인도 그들 자신은 위안부문제나 해결을 둘러싼 과정, 학계에서의 논의를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이들의 문서에서는 수많은 모순이 드러납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일본의 책임을 부정했다고 말하고 다른 서류에서는 제가 자신의 진짜의도를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책임에 언급했다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의 모순과 오류야말로, 이들이 자신들이 읽고 싶은대로 저의 책을 읽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나물캐러 간 처녀들을 잡아가는’식의 강제연행은 없었다고 이제 이들조차 쓰고 있지만, 또 실제로 학계에서는 유곽도 위안소로 봐야 한다는 발표도 볼 수 있게 되었지만, 바로 2,3 년전에 나온 그림책, 나물캐는 처녀를 잡아가는 그림이 그려진 그림책을 감수한 건 정대협이었고 오늘도 비슷한 이미지가 무수하게 유통되고 있음에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조선인 여성의 약취유인을 <위해> 한반도에 직업소개소를 만들었다는 원고측 변호인들의 주장은, 한반도에서는 관련법률이 좀 느슨해서 유괴나 속임수가 많았다는 어느 학자의 주장을 변형시킨 것이겠지만, 그나마 이 논문 역시 다른 학자에 의해 오류를 비판받은 바 있습니다. 학계상황을 잘 모르는 이들이 자신들의 기존 상식에 기대어 소송을 일으키고, 학자를 처벌해 달라고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언론까지 동원해 마녀사냥을 유도해 왔던 것이 제가 처해 온 이 3 년의 정황인 것입니다.

3. 다시, 집필의도에 대해

앞서 언급한 독일의 기사 이외에도, 최근들어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한국의 위안부운동에 대한 의혹의 눈길이 가득 담긴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⁶

이는 바로 제가 우려했던 사태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일본 비판도 정확히 하자고 했던 것이 저의 주요한 집필의도였습니다.

원래는, 서문에 쓴 것처럼,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위안부문제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생각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고, 대립중인 일본의 부정자들과 지원자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⁶ Why Is the Plight of ‘Comfort Women’ Still So Controversial? Newyork Times ,2017/8/14

<https://www.nytimes.com/2017/08/14/opinion/comfort-women-japan-south-korea.html>

Vietnamese women raped in wartime seek justice for a lifetime of pain and prejudice—Victims of atrocities carried out by South Korean soldiers still pursuing reparations decades later, 2017/9/11, Independent

<http://www.independent.co.uk/news/world/asia/vietnam-war-women-seek-justice-mothers-raped-south-korean-soldiers-war-untold-stories-a7940846.html>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쪽의 사고방식에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양쪽의 문제를 비판한 것이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입니다.

그 과정에서, 위안부문제라는 존재를 만든 것을 국가와 자본,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권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 가깝게는 가부장제와 남성주심주의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조선인 위안부의 모습을 저 자신 불편하면서도 있는 그대로 쓴 것은 그러한 구조를 이해하는 일만이 반복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라는 이름, 하나의 국가의 고유명을 규탄하는 것 만으로는 국가와 남성이 여성을 착취하는 구조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원고측과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본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조선인 위안부문제는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결과라는 것이 명백했기에 제국주의의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자 이 문제에 대해 썼던 것입니다. 동시에 현실적으로도, 문제를 정확하게 보는 일만이 문제해결에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사를 극복하는 일은 직시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그렇듯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는 타자를 제대로 보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분이 결여되었었기 때문에 해방 7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우리는 ‘일본’이라는 이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법정에서 서게 된 것도 그 결과겠지요.

물론 저의 이해나 인식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1심 판결이 말했듯, 학문세계 안에서 해결되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제국의 위안부 간행 후 4년동안 저는 다시 다른 관련자료를 읽어 왔지만 아직은 저의 책을 수정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간행 후 만나서 듣게 된 위안부할머니들의 이야기, 그리고 학계의 새로운 동향들은 저의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측이 제출한 피해자의견서에는 제가 ‘강제성을 인정하는지 법적책임을 인정하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다시 명료하게 드러냅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주장해 온 자신들의 생각에 반하는 생각을 매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설사 강제로 끌려 가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이 위안부가 되어야 했던 여성들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때문에 저는 강제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일본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본인들이 귀기울여 주었던 것입니다.

원고측은 제가 한국어판 간행 후에 말하기 시작한 해결방안까지 비난하지만, 저는 그 방안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지원단체가 20년 이상 주장한 법적해결을 꼭 해야 한다면 그런 방법과 논리전환도 있을 수 있다고 했을 뿐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부정하려 하는 그 제안은 한국어판에 쓰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책에는 앞서도 본 것처럼 그저 위안부문제를 둘러싼 지원단체의 주장과 기존 이해에 문제가 있으니 한일협의체를 만들어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고 썼습니다.

자신들의 운동에 방해된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고소한 지원단체, 그리고 그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기대어 너무나 가벼운 기소와 항소를 감행하고 저를 공격해 온 국가에 대해 절망하며 3년을 지내 왔습니다. 이들은, 법적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쓴 것을 두고 법적책임을 부정했다고 말하고, 위안부 관련해 매춘부라는 ‘이미지’를 한국이 부정해 왔다고 쓴 것을 두고, 박유하가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이러한 왜곡이야말로, 대화를 거부하고 상대를 비난한 끝에, 사죄했던 일본의 선량한 이들마저 등돌리게 만든 원인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쓴 것은 그러한 사태를 모두가 알고 바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조롱과 냉담함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엇보다, 위안부할머니들을 이제 그만 편안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이들의 이러한 독선과 아집과 폭력에 의해 3년이상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했을 뿐 아니라 건강마저 훼손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다시 승소한다 해도 잃어버린 시간과 정신적 소모를 메꿀 길은 없습니다. 물론 이들에 의해 땅에 떨어진 저의 명예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재판장님,

저에게 무죄를 내려주시고, 위안부할머니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감행된 지원단체의 고소를 이제 그만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이 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하나를 죄인으로 몰기 위해 9 곳의 법무법인, 10 명의 변호사가 이름을 올린 피해자 의견서가 드러낸 무지와 기만을, 정의로운 판결로써 시정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에, 재판으로서의 정의가 아니라 진짜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저와 국민과, 관심갖고 지켜보는 해외국가사람들에게도 보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7년 9월 27일

박유하